안희정 대권도전 시사…야권 '대선시계' 빨라지나

문재인 이어 친노진영 두번째 주자로 나서

비노 주자들 거리두며 친노와 차별화 시도

친노(친노무현) 진영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가 차기 대선 도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야권 내 대선시계가 빨리 돌아갈 분위기다. 하지만, 비노(비노무현) 주자들은 아직 대선과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친노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 의원이 대선 회고록 출간과 북콘서트 개최 등을 통해 차기 행보에 본격 나선 가운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던 안 지사도 지난 17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장자론(맏형)'을 내세워 차기 대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정신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뒤를 잇는 장자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안을 이어나가는 맏이가 되겠다는 포부가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에서 배출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직접 거론한 안 지사가 그들의 뒤를 이어 민주당의 맏이가 되겠다고 발언한 것은 공식석상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은 친노 내에서 상징성이 큰 두 사람의 관계가 '잠재적 경쟁자'로 바뀌면서 친노의 분화가 가속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두 사람 모두 노 전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이지만 문 의원은 변호사 시절 동업자로, 안 지사는 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인연을 맺는 등 걸어온 궤적은 다르다. 물론 안 지사가 명실상부한 차기 주자 반열에 오르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 고지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안 지사 발언에 대해 문 의원의 대변인 격인 윤호중 의원은 18일 "안 지사가 훌륭한 상속인이 되길 바란다. 물질적 유산은 나누면 반이 되지만 정신적 유산은 배가 된다"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적통' 자리를 놓고 두 사람간 '선의의 경쟁'이 현실화한다면 친노내 세포분열도 불가피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 일각에선 친노 주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놓고 친노가 '파이'를 최대한 키워 자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비노진영은 이 같은 친노의 활동에 비판적이다. 자칫 자신들의 정상적 정치활동까지 대선 준비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손학규, 정동영 상임고문이 문 의원 등의 대선행보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의 호남의 한 재선 의원은 "대선 패배에 대한 자기 비판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에서 차기 대선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18일 광주시의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뒤 강운태 광주시장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박지원 "검찰 후속인사, 호남 배려를"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8일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 후속 인사와 관련, "지역 균형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도 호남 지역 분들이 많이 물러나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검찰 숙청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저에게 토로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철도 파업 및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국제운수노련(ITF)에서 지난 10일 방한해 한국의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와 코레일의 대응책을 조사한 결과 '노조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에 유엔 ILO 국제노동기구에 결사의 자유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제소를 하겠다'고 했다"며 "정부는 유리할 때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 하지만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ILO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시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jkpark@

광주 민주 전·현 기초의원 7명 탈당

민주당 소속 전·현직 광주 지방의원 7명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광산구의원, 이관식 북구의원, 문혜옥 북구의원 등 현직과 전직 4명 등 지방의원 7명은 1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의 새 정치를 안철수와 구현하기로 했다"며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어 대선 불법개입 특별검사제 실시, 철도 민영화 반대, 의료 민영화 중단 등을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탈당이 잇따르자 민주당도 각 지역위원회별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집안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 광주 남구지역위원회는 최근 최영호 남구청장과 나종천·조영표 광주시의원, 박춘수 남구의회 의장 등 남구의원 10명 등 민주당 남구 선출직 전원 간담회를 열고 탈당 지방의원들을 '철새 정치인'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매번 선거를 앞두고 마른 자리만 찾아가는 철새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작태가 안철수 신당 창당을 매개로 다시 활개치고 있다"며 "오직 사익을 위해 새로운 정치 운운하며 탈당하는 일부 인사들은 지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19일 모임을 갖고 현 정치상황에 대해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철회

도의회, 촉구 결의안 통과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18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철회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사전 고지조차 하지 않은 채 긴급 안건으로 날치기 처리했고, 이는 헌법에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로 정부가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철회하고, 정치·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정부 지원 건의

전국 시·도의회 의장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 촉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019년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개정되도록 해 달라고 청와대와 국회,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 같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대한수영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정부 공식행사로써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다른 스포츠대회와 비교해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조속히 개정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은 현재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회의원 15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협의회는 또 이날 인천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촉구 건의문'과 전남도의회가 제안한 '지역축제 향상을 위한 광역 축제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시·군 1개 대표축제 육성 촉구 건의문' 등 총 7건의 건의문을 협의, 처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도의회 '한국사 교과서 수정 촉구 결의안' 등 3건 의결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18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 촉구 결의안'과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채택·의결했다.

도의회는 민주당 권욱 교육위원장(목포2)이 대표 발의한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교육부는 왜곡된 한국사 교과서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검정합격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같은 당 옥부호(함평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이고 제도화해 발전시키자는 것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해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도의회는 또 이정민(보성1·진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전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이 사용하는 기관운영,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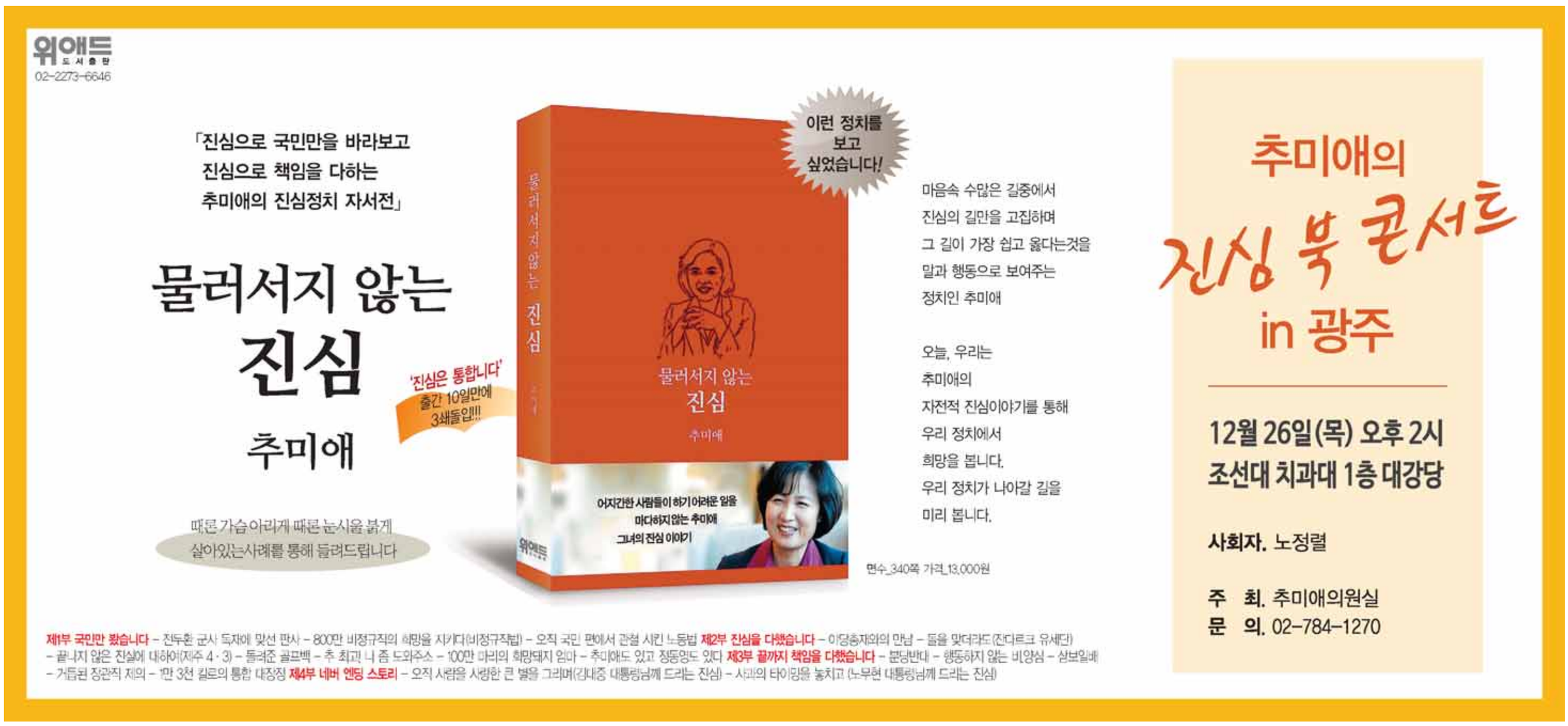
박표진 "광주시교육감 출마" 공식 선언

박표진 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18일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교조와 비전교조 진영의 대결구도로 가는 이번 선거에서 비전교조 진영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전 부교육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광주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학부모·시민이 광주 교육을 신뢰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교육은 실력 광주의 위상 추락, 측근인사 감싸기 행보, 일반화가 어려운 혁신학교 확대, 고교 배정 혼선, 인사 잡음, 특정 교직단체 위주의 의사결정 독점 등 진보라는 이념적 틀에 갇혀 있다"며 현 장휘국 교육감 체제를 비판했다. 또 "교육감의 소통 부재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학교교육이 갈 길을 잃고 교육청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학교장들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 마인드를 접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교육감은 ▲학력향상 프로젝트 추진 ▲실추된 교권 증진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빛고을 인재육성재단 설립 ▲소통하는 교육현장 조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